

◇오인철대한건설협회강원



도회장은 강원
토털 마케팅 경
제사절단 단장
으로 중국 광저
우 선전지역 거

점 시장 개척을 위해 24일 출
국, 27일 귀국.

도내 22개 업체 中 광저우박람회 참가

도가 사드 보복으로 주춤한 중국 시장 복원을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무역1번지인 광둥성에서 토털 마케팅을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기간 광저우시 수출입상품교육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5회 중국 광저우 박람회에 도내 22개 업체가 참가해 제품을 홍보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가상체험장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

로 광저우 퓨리하이주성백화점에 개관한 상설판매장, 강원도 상품관의 개관 1주년을 맞아 관촉 행사도 개최한다. 광저우 강원상품관에는 도내 29개 업체가 입점해 138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국 내 GDP 1조 달러를 최초 달성한 광둥성에서 현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에 나서고 도내 우수상품을 대대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4

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철도 마케팅
경제사절단 단장
으로 중국 광저우
선전지역을 방문
한다.

내년부터 도내 대형 SOC사업 대책 시급

제천~삼척 ITX 정부계획 미반영
춘천~철원 고속도로 당장 어려워
홍준표 대표, 강원도 SOC 부정적

원주~강릉복선전철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연내 완공되거나 완공예정인 가운데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내년부턴 도내 대형 SOC사업이 없어 도와 도정치권의 대책이 시급하다.

23일 도와 도정치권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SOC사업 중 제천~삼척 고속화철도(ITX) 건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강원남부권의 취약한 교통망을 위해 조기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돼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추진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2016~2020년)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 당장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도내 SOC사업이 시작부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춘천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도내 핵심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원도의 SOC확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제2영동고속도로, 양양고속도로 등 수십년간 안되던 SOC들이 거의 다 됐다. 국가예산이 한정된 상황인데 더 이상 요구하면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올림픽 사후대책 발굴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가운데 제2경춘국도와 동서고속철 등은 지역 내부의 이견 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 고위관계자는 "원주~강릉철도에 집중하다 보니 그 이후 사업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진민수김여진

새정부 첫 예산 420조 속 자취 감춘 강원

올림픽 사후관리예산 비롯
대형SOC 신규사업 미반영
도 "최종 제출 전까지 요구"

420조원대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될 새정부 첫 예산이 일자리와 복지부문 등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방침이어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예산 등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5조2000억원으로 설정,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확충과 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SOC 축소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해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SOC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림픽 사후관리사업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못해 적신호가 켜졌다. 올림픽프라자 유산조성사업(74억원)을 비롯해 올림픽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활성화(48억원), 올림픽 아라리 생태축 조성(44억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52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여기에 설악동 집

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7억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4억원) 등도 아직 검토단계다. 대형SOC사업도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기본설계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제출되기 전까지 도 주요예산 반영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도 요구액이 관철될 경우, 국비확보 목표액이 500억~1000억원 정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 관련기사2면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강원 경제사절단과 중국行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사진)은 강원토털마켓팅 경제사절단 단장으로 24일부터 27

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선전지역을

방문한다.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 남방지역 거점 시장 개척을 위한 것으로 광저우박람회 참가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설명회, 현지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工期 연장 간접비 개선 또 용두사미 전략 우려

정부, 제도개선 TF 내달 발족
업계 “매번 생색내기에 그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간접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 기대감과 함께 재정당국·발주기관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 없이는 과거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SOC(사회기반시설)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간접비

개선 특별팀(TF)’이 이르면 다음달 발족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운영된다.

TF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숙제이자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인 간접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 내년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폭 삭감했다. 최대 500억원까지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청구비용의 25%만 지급받은 경우도 허다했다.

김태형기자 kth@ ▶3면에 계속

社 說

간접비 제도개선 생색내기식 안된다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가동된다고 한다. 간접비 개선방식은 대통령 공약에 이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까지 담기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보다 더 늘어나면서 발생한 추가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발주기관들이 관련규정 미비를 빌미로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시공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낸 간접비 소송만 총 33건, 청구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간접비 개선에 본격 나섰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로 볼 때 이번에도 시작만 요란한 채 흐지부지 끝날 우려도 나온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며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결국은 생색내기에 그친 점이 잘 보여준다. 정부의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계약제도 개선에 있어 처음엔 요란하게 제도개선에 나설 것처럼 약

속하지만 결국엔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제도개선 대부분이 사업비 절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제도개선으로 오히려 건설업계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간접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도 적용시기를 올 1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못박아 현재 소송 중인 업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가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1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이를 잘 보여준다.

간접비 문제는 발주기관으로서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분쟁 증가는 건설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도개선을 명확히 해 간접비 지급문제로 인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못해 제도개선을 했다는 식의 생색내기 제도개선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